

시민참여와 국민복지 확대로 민족통일을

박 호 성 _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겸 본지 편집위원장

한국의 21 세기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높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에 대해 뿌리깊은 불신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은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의 자화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X이 그X이다”라는 자조적인 말 속에도 극복될 줄 모르는 정치적 불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알아야 하고, 반대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다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높은 정치적 관심과 깊은 정치적 불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모순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모순은 바로 우리 국민의 치열한 정치적 관심을 뜨거운 정치적 활력으로 결집시켜 나아갈 현실적 힘이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정치적 대안이 부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뜨거운 국민적 결의 같은 것이 이러한 모순적 현상의 배후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21세기는 ‘참여’와 ‘복지’와 ‘통일’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요컨대 “시민참여와 국민복지 확대로 민족통일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세기적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시민참여의 확대’는 정치적 평등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시민 스스로가 국가나 지역 그리고 사회조직 등의 정치나 운영 등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함으로써 일상생활 자체를 민주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국민복지의 확대'란 사회경제적 평등의 확충을 일컫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정책은 성장 제일주의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하면서도 그 혜택으로부터는 배제되어 온 수많은 사회 저변계층이 양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상대적인 사회적 낙후계층을 위한 사회보장과 복지 확대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셋째로, '민족통일'이란 민주주의와 자주성의 토대 위에 구축되는 국토와 민족의 평화적 재통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통일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논의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의 방안들만 난무하는 딱한 실정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마치 통일의 본질과 기본원칙에 대해 서로 충분히 동의하는데도 제시되는 방법들만 달라지는지, 또는 서로 다른 통일의 모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방안들이 그토록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 등에 관해 거의 한 번도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토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에서는 '통일의 방안'이 아니라 '방안의 통일'이 더욱 긴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이란 우선 갈라진 영토와 민족의 재통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적 단합을 다시 이루어내며, 휴전선 철조망을 제거하고, 그 철책 언저리에 포진하고 있는 적대적 군사력을 철수시키며, 나아가서는 서로를 겨냥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파괴함을 뜻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군과 핵무기의 철수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일은 의당 평화를 전제합니다. 통일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평화 없는 통일 또한 불가능합니다. 통일은 상실된 민족적 자주성의 회복을 말합니다. 분단이란 바로 외세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민주적 변혁을 가리킵니다. 분단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자주화와 평화를 동시에 그리고 가장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통일방안만이 모든 민족 구성원이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임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현실적 모순과 모순적 현실

‘개혁’ ‘민족통일’ ‘민주화’ ‘민족자주’ 등의 구호가 소리높이 절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민족주의 등과 결부된 이러한 구호들은, 이 이데올로기들이 겪어온 어마어마한 역사적 고난과 그 자체의 이념적 숭고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상습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되새김질되곤 합니다. 그리하여 이 구호들은 때로는 상식과 교양을 과시하는 사교식탁의 점잖은 형식주의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요컨대 이 구호 자체에 대한 맹목적 애정은 강령과 현실의 거리, 이론과 실제의 틈새에 눈멀게 함으로써, 급기야는 그 구호들을 단순한 유행어나 서로 적당히 양해하고 마는 가벼운 교양의 어휘로 변질시킬 위험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애절한 세레나데가 아니라 우렁찬 함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는 선전포고요, 지칠 줄 모르는 전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복시켜야 할 적(敵)이 아니라 또다시 구축해야 할 요새입니다.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하고 떠들썩한 ‘민주투사적’ 무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순박하게 길들여 나갈 생활 속에서의 녹진한 다듬이질 같은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전쟁으로 시작하여 일상생활로 마감되어야 합니다. 그래

야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적어도 '제도적' 민주화나 법조문 속의 민주주의가 지니는 허구성을 절감한다면, 그것은 더욱 더 절실한 요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의 헌법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민주화'의 구호가 '환상적'으로 절규되어지곤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룻밤 새 신기루처럼 나타날 동화 속의 궁전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한 단면이 바로 민주화의 구호와 비민주적 생활양식의 팽배라는 모순 속에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민족과 민족주의가 통일의 구호로 높이 구가되면서 동시에 문벌, 족벌, 봉당적·지방적 분파의식이 공존하는 모순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이 민족적 일체감과 단합의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전 민족적 과제라 한다면, 이러한 분파, 파벌, 파쟁 의식은 실로 민족적 통합과 민족주의를 그 뿌리에서부터 뒤흔들어 놓는 암적 존재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민족통일을 거창하게 절규하는 무대 뒤에는 소집단 파벌이기주의가 유령처럼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적 구호와 비민족적 의식구조,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현실적 모순—민주주의의 구호와 비민주적 생활양식, 그리고 민족적 구호와 비민족적 의식구조—을 발가벗김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바람직한 건축물이 튼튼히 자리잡아야 할 대지의 토질이 어찌야 한다는 것을 탐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순이 자행되어지는 현장의 토양과 그 본색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과 그를 통한 반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늪과 모래 위에 민주주의의 육중한 구조물을 세워 올리고자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잠재적 환상과 착각을 교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 그것이 바로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